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전략 I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

전략 II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전략 III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전략 IV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I.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우리 산업은 「**성장**과 **정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동향

- **신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 진행**
 - 기술 융복합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급속히 파괴
 - * 구글 스마트카, 필립스 헬스케어 등
 -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모험자본 등을 통해 신시장과 일자리 조기 창출
- **후발국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확보**
 - * 하이얼 GE가전 인수, 화웨이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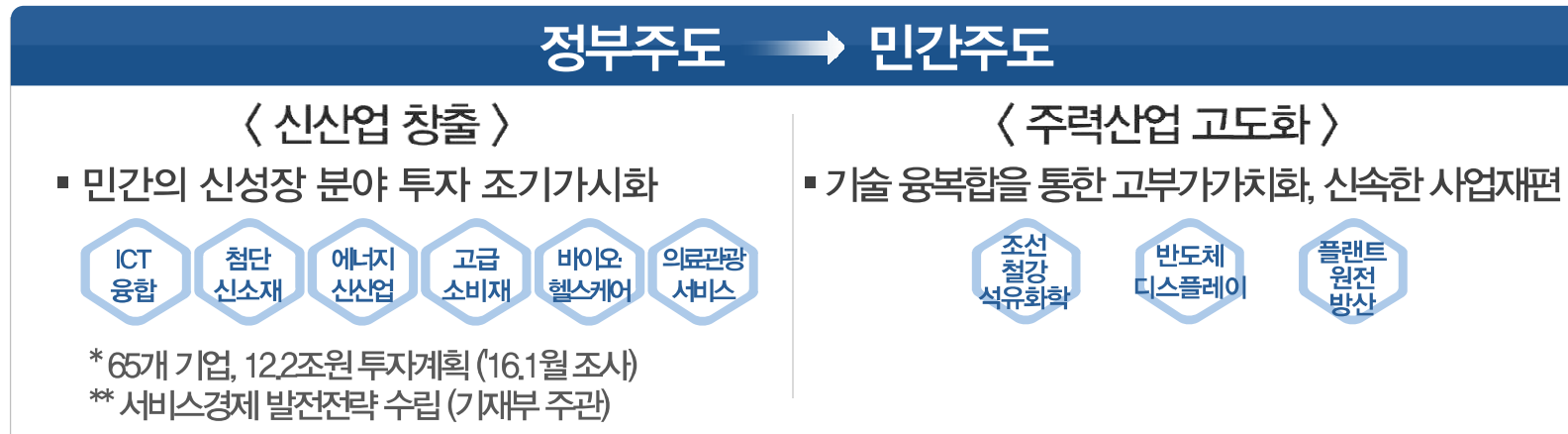
우리 산업의 상황

- **정부는 그간 신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노력**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19대 미래성장동력, 에너지신산업, 제조업혁신 3.0 등
- 유망분야의 **민간투자가 태동단계**이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동력 창출 지연
-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사업재편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

- ➡ (신성장동력)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필요
- ➡ (주력산업) 후발국 추격을 근본적으로 따돌리는 기술 융복합과 신속한 사업재편 요구

II.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개선

- 신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 추진
- 전국 27개 지역전략산업 선별적 규제 제로화
- 융합신제품 신속한 인증 및 표준 정립

정부지원역량 집중

- 신성장동력 분야 R&D 전폭 지원
- 금융·세제·입지·인력 등 총체적 지원
- 초기수요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촉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총력지원 체계 구축

1-1. 분야별 대책 (신산업)

핵심개혁과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

ICT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확보 하겠습니다.

"핵심부품 개발과 R&D 지원확대, 주행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시장진입 지원에 주력해야."

— 융합신산업 간담회, '16.1월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무인기
〈전기차〉 주행성능 향상, 충전인프라 - 배터리 성능제고 및 차체 경량화 지원 - 충전 요금제 다양화 - 제주도 내 충전소 완비(~'17년)	〈스마트카〉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 카메라 · 센서 등 부품 · SW 개발 지원 - 시험운행구간, 주행시험장 확충 - 자율주행 허용 등 규제 조기개선	비즈니스모델, 테스트베드 - 공공수요 중심 실증서비스 개시 - 비행허가구역 · 시험시설 확대 - 항법장치 등 고기능 기술개발
지능형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초기수요 창출 - 제조로봇 시범공장 구축 - 수요 연계 모델 개발 * 예 : 병원용 물류 로봇	소재 · 부품 개발, 인증 개선 - 스마트 섬유 센서 등 국산화 - 제품 · 연관서비스 허용범위 확대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시 우선심사 등)	표준화 및 플랫폼 - 제품간 연동 위한 KS표준 제정 - 대·중소기업간 공통플랫폼 활용 - 제조-IoT 투자펀드 확충

에너지신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습니다.

" 전력 공기업 선투자 등 과감한 시장확대와 성공모델 창출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업계 간담회, '16.1월

ESS	태양광 등	스마트그리드
신규 수요창출 등 산업화 - 송배전용 ESS 구매확대 ('16~'17, 3,800억원) - 태양광 연계 ESS 인센티브 제공 - 비상전원을 ESS로 대체 허용 -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미국) 송배전용, (일본) 소규모 가정용, (도서국가, 페루) 신재생+ESS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 하천·수상·발전소 유휴지내 입지허용 - 전력공기업 투자('16~'17, 1.5조원)를 통해 RPS의무 확대 이행 ('15, 2.6% → '17, 4.2%) - 소재·부품 R&D 대폭 확대 ('16, 1,800억원) - 에너지공기업-태양광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 지원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 비즈니스 성공모델 및 실증경험 확보 *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공동주택 등 -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민간 제공 - 정상외교·GCF·ODA 등을 활용한 종합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1-3. 분야별 대책 (신산업)

핵심개혁과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소비재 · 신소재 · 바이오헬스 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전문인력 · 비관세 장벽해소(고급 소비재), 초기 시장 창출(첨단 신소재), 자금조달 · 생산인력(바이오헬스) 등이 필요합니다."

- 신산업 업계 간담회, 소비재업체 방문, '16.1월

고급 소비재 화장품 · 식료품 · 유아용품 · 패션의류

- 화장품학과 개설 등 인력 양성
- 고부가 제품화 R&D 지원 ('16, 877억원)
- 비관세 장벽 해소 위해
한·중 FTA 채널 활용 및 상호인정 추진
* 유아용품 위생허가 절차 간소화 등
- 한류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해외 판로 개척 집중

소비재 산업 종합육성대책 마련 ('16. 3월)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 · 마그네슘 · 타이타늄

- 신소재시험 인증 시설 확충
- 자동차 · 항공기 등 수요 산업과 연계한 R&D 확대
- 탄소섬유를 활용한 CNG 운반 탱크
시판 허용
-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지원



바이오헬스 의약 · 헬스케어 · 의료기기

- 초기 바이오 벤처전용 투자펀드 조성 ('16, 300억원)
- 바이오의약 생산전문인력 양성 ('16, 100명)
- 개인건강정보 통합 · 활용 시스템구축
- 사용자(병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의료기기 개발



1-4. 분야별 대책 (주력산업)

핵심개혁과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장이 적기에 준공 · 가동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앙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 반도체업계 간담회, '15.12월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철강업계 간담회, '16.1월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 친환경 선박, 고성능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 추진
-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기활법령 제정, 공급과잉기준 마련
 -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 민관공동 업종별 수급 및 적정 설비규모 전망 제시
 - * 일본은 과잉업종별 분석보고서 발표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대규모 투자 통한 세계 1위 유지
 - * 반도체 47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 중국 등 경쟁국과 격차 확보
 - OLED, 파워반도체 등 유망제품 개발촉진



플랜트 · 원전 · 방산

- 미래유망 기술과 수출형 기술 개발 지원
 - * 저탄소 발전, T-X 사업용 모델 등
- 정상회담 등 외교협력 채널 적극 활용
- 수은 · 무보 및 EDCF, AIIB 등 경험자금 활용 수출금융 지원
 - * 수은 18조원, 무보 10조원



중소 · 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공장 구축 · 확산 → 산업전반 생산성 향상

2-1.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핵심개혁과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정부는 획기적 규제 완화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은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차후에 정말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제연구소장, '16.1월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환경 등 규제 완화
(무투회의 등 활용)

-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완화
 - 개인(프로슈머) 생산 전기 직접 판매 허용
 -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입한 전력 재판매 허용
-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완화
 - 대용량(1MW이상) ESS 전력거래소 판매 허용
 - 전력중개사업 허용 (소규모 전기를 모아 거래소 판매)

➔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협약체」를 신설해 추가과제 발표('16.上)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완화

-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
-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 규제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 즉각 해소
 - * 기업애로 접수후 30일내 규제적용여부 회신
 - 규제존재시 규제특례여부 60일내 확정

신산업 전반에 대한 신속한 인증·표준 정립

- R&D 단계부터 인증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 ('16, 300억원)
 - 정부R&D 사업 수행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 이미 개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신속한 적합성 인증 (6개월내)

해외인증기구와 상호인정 추진

- 국내 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 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부여 방안 추진



2-2.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핵심개혁과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

R&D · 인력 · 판로지원 등에 정부 역량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은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정부가 R&D자금, 저리융자 등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융합신산업 간담회, '16.1월

R&D 집중지원

-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대폭 확대
* ('15) 2.5조원 → ('16~'17) 7조원
— 제조업과 서비스 · 문화 · 콘텐츠 간 융합 R&D 우선 지원
-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 세액공제 전면 허용 (7개)

금융 · 세제 · 입지 지원확대

-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5조원 지원
-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 · 부품 할당관세 확대
-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지정 확대 (국토부)

맞춤형 인력양성

- PRIME사업과 연계, 신산업 등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 신산업 분야 기업과 대학 공동 석박사급 인력 양성
* ('15) 700명 → ('16) 1,400명
-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 개발

수요창출 및 판로지원

-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 대폭 증액
* ('15) 2.5조원 → ('16) 6.4조원
-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 ('15) 214개 → ('16) 440개
- 정상외교, 한류, ODA 등을 활용, 해외 판로 지원

신산업투자 ·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민자 · 외국인투자 및 해외 M&A 확대 방안 마련 ('16.4월)

신성장동력 투자애로를 상시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거버넌스 구축 (원스톱 애로해소)

- 산업부 주관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 신설 (애로 접수창구 일원화)
-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책임부처 지정 및 무투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
- 「신산업민관협의회」 (업계, 국내외 전문가 중심)를 신설하여 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신산업 지속 발굴, 지원도 병행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 (산업부)

- 애로사항 접수 (창구 일원화)
- 책임 및 협조부처 지정



책임부처

- 주요 대형 프로젝트별 국장급 담당관 지정
- 민관 협의체(T/F) 구성
- 관계부처 협의 및 개선방안 도출



무역투자 진흥회의

- 책임부처 개선방안 보고
- 처리 경과 및 결과 보고



“400미터 계주 경기의 승부는
곡선구간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산업은 지금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지금 성장 궤도에 제대로 진입한다면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립니다.”

